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

: 국가형성기 국면별 접근을 중심으로

조혁진(연세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형성기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를 분석한다. 2015년 현재 각각 62년, 54년째 지속되어오고 있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질서를 틀 지우고 있다.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내부적 국가형성'과 '외부적 국제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동맹의 제도화 경로를 경험해왔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형성기와 전쟁 전후의 결정적 국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동맹의 제도화에 촉진 또는 지체 요소로 작용했던 국가 외부적 배열구조로서의 동북아 지역질서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를 적대시 하는 동맹의 존재는 동북아 지역 통합 및 협력에 지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제어 : 한미동맹, 조중동맹, 국가형성, 동아시아 지역구조

I. 머리말

이 연구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¹⁾의 제도화 경로를 분석하면서 첫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질서의 틀을 형성한 한미/조중 동맹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가?, 둘째, 두 개의 동맹은 어떤 경로를 통해 제도화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남과 북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각각 1953년과 1961년 체결되어 현재까지 '혈맹(血盟)'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수많은 동맹들이 존재해왔으나, 동맹관계를 '혈맹'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²⁾ 이 연구는 '혈맹'의 결성과 그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두 국가의 '후견국과의 동맹의 제도화'와 '국가형성'이라는 국가의 외부와 내부의 관계를 다룬다. 스카치폴(Theda Skocpol)은 국가는 계급으로 분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와 국제적 국가체계라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조건 및 압력과 계급구조적인 경제 및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내적 이해관계의 상호교차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 힌체(Otto Hintze)는 군사기구와 국가기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제적 기구를 결정짓는 두 요소인 사회 계급의 구조와 상호관계에서의 위치, 세계 전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국가들의 외부적 배열(external ordering of the states)⁴⁾에 주목한다. 이러한 국가 내부-외부 관계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국가형성기 국가가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과정과 국제체제 속에서 국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군사동맹은 흔히 '북중동맹'으로 불린다. 이 연구에서는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조중'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Stueck, William, and Boram Yi, "An Alliance Forged in Blood: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3, no. 2, 2010, pp. 177~209.

3)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31.

4) Hintze, Otto,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Felix Gi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183.

가의 위치가 상호 교차하는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시각의 첫 번째 차원은 국가 내부이다. ‘국가의 형성 과정 중에 국가는 어떻게 사회경제적 구조를 확립해나가는가?’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물리적 강제력 확보, 자원 추출능력 확보, 전쟁 수행능력 확보의 관점에서 국가 건설자의 대내적 권력의 구축 및 강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분석 시각은 ‘국가들의 외부적 배열 구조’로서의 ‘동아시아’ 차원이다. 국가 내부-지역 구조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일견 국가 외부의 관계로만 간주되는 동맹 형성 과정에서의 대내적 요인 및 효과와 일견 국가 내부의 과정으로만 간주되는 국가형성의 대외적 변수인 외부 후견국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시기 중심의 접근이 아닌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을 설정하여 맥락의 대조로서의 비교 사⁵⁾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추후 전개될 사건의 틀을 만들어내는 시기 또는 사건으로서의 결정적 국면을 한국전쟁 이전의 불완전한 국가형성기, 국가건설자의 권력 장악, 후견국의 개입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동맹은 국제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맹은 국가들이 가상 또는 실제의 적을 상정하여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동맹의 형성에 관한 이론은 주로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세력균형론은 국가 간 세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정책이 동맹 형성의 동인임을 설명한다. 모겐소(Hans Morgenthau)⁶⁾는

5) Skocpol, Theda, and Margaret Somers,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2, no. 2, 1980, pp. 178~179.

6) Morgenthau, Hans, and Kenneth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85.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외부 위협에 대응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가 동맹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월트(Stephen M. Walt)⁷⁾는 국가들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경우를 균형, 외부 위협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을 편승 행위라고 분석한다. 동맹의 유형은 동맹국의 동맹 형성 의도에 따라 세력집합동맹과 자율성-안보 교환 동맹으로 나눌 수 있다. 세력집합 유형의 경우 힘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전쟁 또는 분쟁에서의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율성-안보 교환 동맹의 경우 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체결된다.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안보를 제공하며, 약소국은 강대국에 의한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희생하는 형태를 보인다.⁸⁾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져왔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연구들은 주로 동맹의 관리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⁹⁾ 이러한 연구 경향은 동맹이론을 통해 한미동맹관계의 비대칭성에 집중하면서 약소국인 한국의 동맹관리 정책과 대응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동맹 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협상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의 형성과 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이승만의 외교적 업적을 강조하는 연구경향과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의 외교적 업적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은 당시 생존을 위해 한미동맹을 달성한 것은 대미전략의 성공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동맹의 달성은 이승만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⁰⁾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7)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8)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10~911.

9) 김우상, “한-미 동맹의 이론적 재고.”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1호, 2004;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전제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집 2호, 2004.

10) 유영익, “한미동맹 성립의 역사적 의의: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제36집, 2005;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영익·이재진 편 『한국사 6·25 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Kim, Stephen Jin-Woo, *Master of Manipulation: Syngman Rhee an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1953-1960*. Seoul: Yonsei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 및 그 특수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한미동맹 체결 과정에서 이승만의 친미적 성향과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 등에 집중하고 있다.¹¹⁾

조중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냉전시기 전체 혹은 장기간에 걸친 관계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¹²⁾ 대표적으로 항일무장 투쟁 시기와 국공내전, 한국전쟁 시기를 통틀어 조중관계를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 규정하는 연구들이 있다.¹³⁾ 이러한 연구들은 양국관계가 북한에게는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이 필요했고, 중국에게는 중국 동북부의 안보가 북한의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정학적 인식에 주목한다. 양국관계의 비대칭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양국관계를 긴장된 동맹(strained alliance)¹⁴⁾으로 표현하면서 주로 조-중간의 협력과 갈등의 상호작용 문제에 집중하면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¹⁵⁾

일반적으로 동맹은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달성되는 경우에 비해,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달성되었다는 점은 다소 흥미롭다. 또한 각 개별 동맹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동맹의 기본 원리 상, 가장 또는

실제의 적을 상정하지 않는 동맹이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대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동맹 연구는 적실성을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한반도의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한국전쟁 이전 불완전한 국가형성기

약소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외부의 위협에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외부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정의된다.¹⁶⁾ 약소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국가의 힘을 빌려오거나 그 힘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도움을 얻는 중요한 방법은 타국과 공식적인 동맹을 맺는 것이다.¹⁷⁾ 신생국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였는가?

1. 대한민국의 사활적 과제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사활적 과제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 미국 정부문서에 의하면,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이 최초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1949년 4월 13일이다.¹⁸⁾ 미국의 주한특별사절 무초(John J. Muccio)는 4월 13일 이승만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면담에서 이승만은 무초에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합의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16)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 Cass, 1981, pp. 52~53.
17) Ibid p. 120.

18)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April 14,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7. p. 988.

University Press, 2001; Park, Chang Jin, "The Influence of Small States upon the Superpowers: United States-South Korean Relations as a Case Study, 1950-1953." *World Politics*, vol. 28, no.1, 1975.

11)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서울: 두레, 1994; 박태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이장희 외,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서울: 백산서당, 2004, pp. 167~190.

12) 박종철, "북중관계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4집 1호, 2010, p. 91.

13) Chen, Jia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n Historical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Uneasy Al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2003; 박종철, "순망치한의 혈맹: 중국의 북한 지원을 중심으로 (1953-55년)." 『사회과학연구논집』 제 31집, 2007.

14) Simmons, Robert R.,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15) 박종철,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제10집 2호, 2009; 고수석, "북한-중국 동맹의 변천과 위기의 동향: 동맹이론의 적용과 평가."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이상숙, "북한-중국의 비대칭관계에 대한 연구: 베트남-중국의 관계와의 비교."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이 때 이승만은 무초에게 1882년의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 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무초에게 1882년의 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새로운 우호통상조약 체결 교섭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이승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¹⁹⁾

당시 대한민국은 ‘반쪽 국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²⁰⁾ 첫 번째는 국가형성연합 내부의 분열이다. 당초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가능케 했던 주요 기반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후원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지주세력의 정치적 결사체였던 한민당의 이승만 지지였다.²¹⁾ 국가형성연합이었던 이승만과 한민당은 친일파 문제와 반공정책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권력 배분 문제와 농지개혁 문제를 두고 균열을 보이면서 불화가 심화되었다. 두 번째는 수립된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도전하고 있던 세력들의 존재와 활동이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한 단독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수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사건 등 정부에 대항하는 무장봉기와 반란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수립된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도전하는 세력의 활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²²⁾ 이처럼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내-외부의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의 철수의 연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대응만 하고 있었다.²³⁾

1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in Korea (Washington, April 15,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7. p. 992.

20)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p. 57.

21) 안철현,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 28집 2호, 1994, pp. 167~168.

22) Merrill, John,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143.

23)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November

남한 군대의 전쟁수행능력 역시 북한에 질적, 양적으로 열세였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조선인민군의 병력은 약 20만에 달했으나 국군의 규모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대해 이승만은 "우리 육군 병력 대부분은 소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쓸 수 있는 탄약은 3일 치에 불과하다." 라면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적절한 무기를 충분히 공급 받는 것이 경제회복 보다 훨씬 중요하다."²⁴⁾라고 말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자원추출능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여러 문제들은 외부의 지원 없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이 재정적, 경제적 원조를 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원조가 한국인들의 생존과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활적인 것이며, 한국이 미국에 원조를 요청하는 것은 한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²⁵⁾ 무초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중으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적절한 군대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잘 준비된 반체제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대내적 도전과 적대적인 대외적 무력의 위협에 직면했다."²⁶⁾고 보고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 확보

대한민국과 비교해볼 때, 국가형성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수행능력, 자원추출능력 등에서 앞서 있었다. 김일성은 국가형성 초기 과정부터 강력한 군대를 갖추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김일성은 만주에서부터 함께 활동하던 빨치산 동료들을 군대창설에 투입시켰고, 최초로 건설한 공장들

19, 19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6. pp. 1332~1333.

24)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Panmun, 1978, pp. 248~249.

25)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September 3, 19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6. pp. 1290~1292.

26) Ibid. pp. 1325~1327.

중 하나는 총과 탄약을 제조하는 군수공장이었다.²⁷⁾ 북한의 국가형성그룹은 1946년 4월 무렵에 이미 국가기구에서 체제저항적인 요소를 척결하였고 남한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와 경찰 기구를 창설, 발전시켰고 영토 내에서의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⁸⁾

전쟁수행능력의 확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전쟁 이전 북한은 남한에 훨씬 더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고, 북한의 군사력은 소련의 후견 하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²⁹⁾ 또한 북한의 군사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인적 자원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의 병력은 약 20만이었으며, 이들 중 약 4-5만 명이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여한 병사들이었다. 총 병력의 25%에 해당하는 병력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조선인민군의 형성에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역시 북한의 우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정보당국의 보고서는 “북한군대의 훈련, 기강 및 사기가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보다도 뛰어난 상태이며, 남한 군대의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나며, 만약 내전이 발생한다면 북한군이 승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³⁰⁾

IV.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선택 : 작전지휘권의 이양과 국가건설자의 권력 강화

남과 북의 국가 건설자 이승만과 김일성은 한국전쟁에서 자신들의 작전

지휘권을 후견국에 이양하였다. 남북한의 작전지휘권 이양 문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자신의 후견국에게 전쟁수행을 위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과정은 사뭇 달랐다.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두 국가건설자는 국가의 존폐 위기에서 국가 주권 중 핵심적인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으나, 오히려 이것은 국내적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국가건설자의 국내적 권력 강화 과정은 모두 다 내부의 도전자와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두 분단국가의 국가 건설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공고한 권력을 얻게 되었다.

1. 이승만의 선택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트루먼은 즉각적인 참전 결정을 내렸다.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큰 지원군을 얻게 되지만, 이승만은 자국 군대를 유엔군의 한 소속군으로 편입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전쟁 중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포기한 대가로 이승만은 더욱 강력한 국가 억압 기구를 건설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에 의한 ‘국가’의 보호를 믿고 자신은 ‘정권’의 사수에 주력했다.³¹⁾ 해방 직후부터 자신을 정점으로 한 민족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을 분열은 무조건 반역이라며 공격³²⁾ 해왔던 이승만에게 내부의 적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었다.³³⁾ 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들은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이 국내 권력 강화를 위해 ‘국가 폭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27) 서대숙 지음·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창계연구소, 1988, p. 99.

2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 1996, p. 408.

29) 박종효 편,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서울: 선인, 2010, pp. 324~326.

30)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November 12, 19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 1948*, vol 6. p. 1325.

31) 전상인, “스카치폴의 혁명, 탈리의 전쟁, 그리고 한국의 국가(Ⅱ).” 『연세사회학』 제14호, 1994, p. 52.

32)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p. 112.

33) 문상석, “한국전쟁,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출발점: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 제86집, 2010, p. 97.

국가는 국민을 내·외부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국내 도전세력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외부 전쟁에서의 국민의 보호를 포함한다. 한국전쟁 시기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이 내부의 경쟁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남한의 국가는 자신의 국민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을 내부의 도전세력으로 간주하여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2. 김일성의 선택

중국은 북한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반도 출병을 결정하였다. 10월 21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겸 정치위원 평뎬화이(彭德懷)는 김일성과 만나 인민지원군 사령부에 조선인 간부 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일성은 연안계 박일우를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으로 배치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원으로 참전한 평뎬화이는 조선인민군의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작전지휘권을 북한 측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뎬화이는 김일성을 직접 만났다. 이 만남에서 김일성은 양국 간의 연합 작전 문제에서 참모진과의 연락 및 정보교환만을 주장하였고, 총지휘부를 가까이 설치하거나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 스탈린이 중국의 손을 들어 주었고, 중국군이 정(正), 조선인민군이 부(副)의 위치를 맡기로 합의되었다. 이후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에서 북한 측 인사는 김웅이 부사령관으로, 박일우가 부정치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전쟁에서 더 이상 군사지휘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³⁴⁾ 연안계 출신 박일우가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 정치위원, 당위원회 부 서기로 임명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조중연합사령부의 설치로 김일성이 행사하던 작전지휘권이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사령부 내 조선인 최고 지위는 김일성이 아니라 박일우가 지니게 되었다.

조중연합사령부의 설치로 전쟁 수행에서 한걸음 물러난 김일성은 전선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축소됨과 동시에 전쟁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적 제거 시도를 전개한다.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쟁 개시 후 6개월을 평가하면서 출신 계열과 직책을 막론하고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이때 비판과 숙청 대상이 된 간부들은 연안계의 무정과 김한중, 소련계의 김열, 항일유격대 출신의 김일, 최광 등 이었다.³⁵⁾ 비슷한 시기에, 소련계의 대표 격인 허가이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이는 내무기관과 군부에서 김일성의 견제 세력이 축소된 것을 의미했다. 이후 박헌영을 포함한 남로당 계열 인사들 역시 반국가, 반혁명 혐의로 체포되었다.³⁶⁾

중국인민지원군과의 연합사령부 설치로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김일성은 라이벌들의 제거로 전쟁책임을 회피하는데 성공하였다. 무정은 중국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로, 박일우는 조중연합사령부에서 조선인 최고 지위에 있는 군사적 위치, 허가이는 당내 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헌영은 과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남로당의 책임자로서 각각 김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연안계, 소련계 등 계파는 계속 존재했으나, 개인적으로 김일성의 라이벌들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전쟁 기간 동안에 축출되었다.³⁷⁾ 이는 김일성이 한국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34)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2002, pp. 587~595.

35) “현 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1950년 12월 21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판: 1951-1952』, pp. 28~29.

36)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02.

37)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p. 434~435.

V. 국가 건설자의 권력 장악과 후견국의 개입

부산정치과동과 8월중파사건은 남한과 북한의 국가건설자가 대내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분기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마땅한 대체인물이 없다는 것과 전시 작전 수행의 불리함에 대한 우려로 이승만의 권력 장악을 승인하였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개입하여 김일성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승만은 먼저 도전세력의 제거를 시작한 것이었고, 김일성은 도전세력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승만은 후견국 미국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김일성은 후견국 소련과 중국이 언제든 자신을 몰아낼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김일성은 후견국과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전개하였고, 이는 김일성 세력이 북한의 내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부산정치과동

1952년의 부산정치과동은 이승만이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였다. 이승만은 1951년 11월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의 양원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출하지만, 1952년 1월 143대 19라는 압도적 차이로 부결된다. 그 후 야당세력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승만은 위기에 처했다. 1952년 5월, 이승만은 대구의 육군참모총장에게 1개 사단 병력을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부산으로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목은 치안유지였지만 실제로는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5월 25일 0시를 기해 임시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회 압박을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이틀째인 5월 26일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납치하여 50명의 국회의원들을 감금하였다. 이후 발췌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1952년의 정치과동은 일단락된다.³⁸⁾

주한 미국 대리대사 라이트너(Allan Lightner)는 이승만의 이러한 반민주주의적 행동이 외부 세계에 미칠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강경한 행동을 통해 이승만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제어해야한다고 보고했다.³⁹⁾ 미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한반도 개입 명분이 무색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부의 입장은 국무부와 달랐다. 군부는 이승만의 이러한 행동이 전쟁 수행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여겼고, 만약 이승만의 행동을 저지할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면 현재 전쟁 중인 상태에서 병력 이동이 여의치 않음을 들어 군사행동에 반대하였다.⁴⁰⁾

미국 정부는 논의 끝에 이승만을 제한적으로 지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장택상이 제안한 발췌개헌안을 사태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했다.⁴¹⁾ 이로써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후견국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은 전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미국의 ‘암묵적’, ‘제한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승만은 이를 통해 1960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⁴²⁾

2. 8월중파사건

38) 이철순, “부산정치과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미국의 국가이익의 규정을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0권, 2001, pp. 322~324.

39) “The Charge in Korea (Li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Pusan, May 28, 195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15 Korea. pp. 264~265.

40) Ibid., pp. 274~276.

41) 조용중, 『대통령의 무혈혁명: 1952 여름, 부산』, 서울: 나남, 2004, p. 243.

42) 김일영, “전시정치의 재조명: 한국전쟁 중 북진통일론과 두 갈래 개헌론의 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2호, 2002, p. 194.

북한의 국가형성연합은 국내출신 공산주의자들, 중국에서 활동한 연안계, 김일성 중심의 빨치산 출신들, 소련출신 한인 2세들로 구성된 소련계 등 4개의 분파로 이루어져 있었으나,⁴³⁾ 강력한 정치적 중심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⁴⁴⁾ 오직 김일성만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⁴⁵⁾ 휴전 이후 국가형성연합 세력 내 김일성(계)에 대한 비판은 전후 경제 건설노선을 둘러싼 사회주의 이행 논쟁과 개인숭배 비판 문제의 두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경제원조는 전후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했다.⁴⁶⁾ 전후 경제 건설 노선 대립과 관련한 김일성 반대세력의 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의 성격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1956년 2월에 열린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개인숭배 비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도부 내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개인숭배 문제는 없으며, 설사 그것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박헌영이 개인숭배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개인숭배 논란을 피해갔다. 개인숭배 문제에 김일성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이자 연안계를 중심으로 반김일성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1956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윤공흠이 김일성 지도부를 비난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윤공흠, 서휘, 리필규 등이 중국으로 망명했다. 전원회의는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고 그들 중 윤공흠과 서휘, 리필규를 출당조치 하고, 최창익과 박창옥의 당직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최창익과 박창옥의 내각 부수상 직위도 박탈되었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다른 파벌이

공개적으로 김일성계에 도전한 사건이었다.⁴⁷⁾

이 사태에 소련과 중국은 미코얀(Anastas Mikoyan)과 평택화이를 파견하여 개입했다. 김일성은 중소대표단의 개입에 대응하여 당시 오진우가 이끄는 군 병력을 평양 인근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⁴⁸⁾ 이는 중소대표단의 개입과 함께 연안계가 북한 주둔 중국군과 합세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던 것이다. 미코얀과 평택화이의 요구로 다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8월 결정의 번복이 이루어졌다.⁴⁹⁾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이 중소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 지도부를 축출할 계획이 있었으나, 중국과 소련이 각기 다른 계파를 후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과 당시 상황에서 김일성을 대체할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⁵⁰⁾

이 사건은 김일성에게 후견국의 개입을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소련과 연계된 국내 세력은 중·소와 결탁하여 김일성을 축출할 수 있다는 위협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외부 연계를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했고, 그 중 외부 후견국의 가장 강력한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북한 주둔 중국군의 철수를 요청하게 된다.

북한의 중국군 철수 요청의 표면적인 이유는 남한에서 미군 철수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⁵¹⁾ 그러나 중국군의 북한에서의 임무 ‘항미원조보가위국(抗米援朝保家衛國)’⁵²⁾은 아

43) 이종석,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 친소파·남로계·연안파 ‘숙청’에 대한 최초의 연구.” 『역사비평』 통권 8호, 1989, pp. 245~246.

44)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 438.

45)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1』,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304.

46) 박종효 편,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Ⅱ』, 서울: 선인, 2010, pp. 128~130.

47) 박종철, “북한의 종파사건과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제 9권 제 3호, 2009, p. 208.

48) 위의 논문, p. 224.

49)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 565.

50) 이종석,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새정치전략연구』 제6권 2호, 2010, p. 400.

51) “귀국하는 중국 인민 지원군 환송 대회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연설.” 『조선중앙년감 1959년: 국내편』, pp. 10~11;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거.” 『조선중앙년감 1959년: 국내편』, pp. 169~170.

직 완수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하거나, 경제력이 우세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남한에는 미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었다. 이런 주변 상황은 김일성이 중국군을 철수시키면 안보 공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했다. 중국군의 철수가 완료되던 시점에도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 훈련을 비난했던 것⁵³⁾을 보면, 북한은 안보 불안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휴전 이후 안보 보장자로서 기능하고 있던 중국군을 철수시키는 선택은 안보의 관점에서 결코 합리적이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 위협’을 거의 매일 강조하던 북한이 안보 불안 속에서 중국과 공식적인 안보 지원으로 상징되는 상호방위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중국군을 철수시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개입을 경험한 김일성으로서 는 중국군의 주둔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군은 언제든지 김일성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조·중 관계의 매개자의 위치에 있는 연안계를 배제해야만 했다.⁵⁴⁾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통로인 중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외부 연계를 차단하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52) “中國各民主黨派抗美援朝保家衛國的聯合宣言(1950年 11月 4日).” 刘金质·杨准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 文件匯編 1 (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p. 54-56.
 53)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조선 동포들을 구제할 데 대한 조치.” 『조선중앙년감 1959년: 국내편』, pp. 158-159.
 54) 정병일, “북·중 관계에 미친 연안파의 위상 재조명: 정치·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8집 2호, 2010, p. 289.

<표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계과별 구성

연도	소련계	연안계	김일성계	국내계	기타
1946	8(3)	15(6)	4(2)	10(2)	6(0)
1948	15(5)	17(4)	8(3)	15(3)	12(0)
1956	10(2)	18(2)	11(5)	24(1)	8(1)
1961	2(2)	3(2)	37(6)	12(1)	31(0)

* 괄호 안의 숫자는 상임위원회(정치국)위원의 숫자.

출처 : 강인구·조한범, “북한체제 형성기 한인 소련파의 권력진출과 축출과정.” 조한범 엮음, 『해외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 I』, 서울: 선인, 2006, p. 222.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1961년에 이르면 소련계와 연안계는 김일성계에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약화되었다. 기타 인물 31명 대부분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등용된 젊은 테크노크라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일성계는 1961년에 이르러 권력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I. 동맹의 제도화 촉진 및 지체요인 : 미일동맹과 중소갈등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에 영향을 미친 국가들의 외부적 배 열구조로서의 지역적 변수는 미일동맹과 중소갈등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변수로서 미일동맹과 중소갈등은 남한과 북한의 동맹의 제도화 경로에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의 제도화를 촉진하였으나, 한국이 미국에게 점점 더 의존적인 국가의 성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갈등에서 북한은 두 후견국 중 어느 한 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면서 후견국과의 동맹의 제도화가 지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자주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동맹의 제도화 이후 북한의 기본적인 외교노선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미일동맹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들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한국전쟁을 계기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전후 처리를 완료하였고, 미일관계는 군사적 동맹 파트너로 발전하였다.⁵⁵⁾

한국전쟁 이전에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안보 공약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의 위협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 가시화되자 이승만은 일본의 부활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임을 주장하게 된다. 1951년 3월, 이승만은 트루먼을 향해 “지난 수세기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에 고통 받은 아시아의 국가들은 일본의 재무장 의도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한국의 안보 및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군사력과 최소한 대등해야 한다.”⁵⁶⁾라고 주장했다.

미일동맹의 체결은 한미동맹의 제도화에 다음과 같이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이승만은 계속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왔다.⁵⁷⁾ 그러나 미일동맹 결성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대미동맹 조약 체결 요구에서 일본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전후처리를 완료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자, 이승만은 일본의 팽창주의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위협인식을 통해 한미동맹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봉쇄의 의미에서 머물지 않고,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의 부활에 대응하는 이중적 봉쇄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⁵⁸⁾

55) 김남균, “미국의 일본안보정책에 끼친 한국전쟁의 영향,” 『미국사연구』 제4집, 1996, p. 294.

56) 양승환박명림윤상진 편, 『이승만(1): 트루먼-이철회위 대통령과의 서신』, 서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0, pp. 111~112.

57)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영익·이재진 편 『한국과 6·25 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 289.

5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Young

둘째, 이승만은 미일동맹을 한미동맹의 모델로 인식하였다. 이승만이 이러한 인식을 한 배경에는 미일동맹이 상대적 약소국인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체결된 동맹이 아닌, 상대적 강대국 미국이 먼저 동맹 체결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였다는 특성과 함께 미국의 아태 지역에서의 반공 보루 건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한미 군사조약이 가능한 한 강력한 것이 되기를 원했⁵⁹⁾ 그것은 미일조약과 유사한 형태로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⁶⁰⁾

미일동맹 체결 이전 한국의 동맹체결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 또는 방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미국의 대 한국 안전보장의 성격만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미일동맹 체결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유사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즉, 미일동맹은 이승만에게 한미동맹이 어떠한 형태의 동맹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중소갈등

1956년부터 시작된 중소갈등과 1961년 7월 조소, 조중동맹 체결 이전까지의 북한의 대중, 대소 외교행태는 주로 등거리외교로 설명된다.⁶¹⁾ 북한의 두 후건국 중국과 소련의 대립의 단초는 평화공존론과 개인승배문제를 둘러싼 1956년 2월의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비롯되었다.⁶²⁾ 이후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중국과 소련

(Seoul, August 5, 1953 - 10:30 a.m.).”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15 Korea, Part 2.* p. 1473.

59) Ibid., p. 1472.

60) Ibid., p. 1437.

61) Zagoria, Donald S., “The Sino-Soviet Conflict and the Korean Problem.”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0, no. 2, 1977, p. 89.

62) 편집부 엮음, 『중소대립과 북한: 사회주의진영 연구 기본 자료집』, 서울: 나라사랑, 1988, p. 14.

의 의견 대립은 격화되었고,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했고,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로 비판했다.⁶³⁾

조선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자 소련과, 패전의 위기에서 구하여 국가의 생존을 지켜준 전우 중국 사이의 대립은 북한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배경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의 주된 목표는 경제 복구였다.⁶⁴⁾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광범위한 원조가 없다면, 북한의 경제 복구는 불가능한 목표임을 인식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이념갈등에서 어느 누구 편에도 서지 않도록 극도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⁶⁵⁾

이러한 배경은 왜 북한이 소련과 중국과의 군사동맹의 제도화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달성하였는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동맹이론에 기반한 설명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동맹의 제도화는 적어도 1953년에 달성될 수 있었다. 세력균형 시각에 따르면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제도화하였던 1953년은 한반도 내에서 세력 불균형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남한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력 결집을 달성하면서 북한에 비해 우세한 세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가들은 세력 균형을 시도한다는 이론에 따르면 북한 역시 비대해진 남한 측 세력에 대응하여 후견국과의 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국력 결집을 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동맹은 1961년에 가서야 제도화되었다.

중소 갈등의 와중에서 북한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정책을 펼쳤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주 노선을 선언하여 어느 한 후견국과의 밀착이 가져

6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p. 217~218.

64) “정전협정체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한 방송연설 (1953년 7월 28일).” 동아일보사 편,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서울: 동아일보사, 1989, p. 114.;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 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년 8월 5일).”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 5권 경제발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111~153.

65) Cho, Soon Sung, “North Korea in the Sino-Soviet Rift: 1st Phase.”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0, no. 1, 1987, pp. 6~7.

올 수 있는 타 후견국의 보복적 행동을 억제하면서 두 후견국의 대 북한 영향력을 균형화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대외적 독립성의 확보를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전후 국가 건설과정에서 중소갈등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군사동맹의 제도화를 지체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II.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는 두 동맹의 제도화 경로의 차이에 대해 대내적 국가형성과 그 과정에서의 후견국의 역할, 외부적 배열구조로서의 동아시아 지역구조가 미친 각각 다른 영향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3년 8월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맹의 제도화를 달성하였다. 동맹의 제도화는 이승만이 정부 수립 이후부터 후견국 미국에게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으로서 후견국과의 공식적인 동맹의 결성으로 국가 건설자로서 대내적 권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승만이 추진한 동맹의 제도화는 단순히 안보의 필요뿐만 아니라 국가형성 과정에서 빈약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동원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은 남한의 전쟁수행권리를 이양 받아 남한을 구해내었고 이는 이승만이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대내적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한미동맹의 제도화 과정에서 대일강화조약과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의 제도화를 촉진시킨 변수로 작용했다. 일본이 남한의 유일한 후견국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함께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으로서는 양면의 위협으로부터의 보장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제도화하는 것을 더욱 촉진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동맹의 제도화는 1961년에 7월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1961년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마무리 하고, 김일성계가 완전히 국내 권력을 장악한 시점이다. 김일성은 외부 후견국이 국내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한 후 비로서 동맹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국가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은 철저하게 외부 후견국과의 연계를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4개 분과로 이루어진 북한의 국가형성연합이 각각 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력한 외부 후견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맹 제도화 이전 북한의 대내적 권력 강화의 과정은 지역적 요소인 중소 갈등과 맞물려 돌아갔다. 중소갈등의 와중에서 북한은 전후 국가건설의 핵심인 경제 복구를 위해 중국과 소련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중·소 두 후견국과 동맹의 제도화 역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중소갈등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 후견국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두 후견국의 영향력을 적절히 균형화 시키면서 북한의 당면 목표인 전후 경제복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국가형성기 동맹의 제도화의 두 가지 차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의 제도화는 남한의 국가형성의 담보가 되었던 반면, 북한의 경우 후견국과의 동맹의 제도화는 국가건설자의 대내적 권력 구축에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외부적 배열구조로서의 지역질서 차원에서 동맹의 제도화는 동아시아의 분단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이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써 동아시아는 지역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동맹은 필연적으로 적의 존재를 상정하는 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동맹의 구성국들이 서로를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외부적 배열구조로서의 동아시아 분단구조가 여전히 지속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구·조한범, “북한체제 형성기 한인 소련과의 권력진출과 축출과정.” 조한범 엮음, 『해의 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 I』, 서울: 선인, 2006.
- 고수석, “북한-중국 동맹의 변천과 위기의 동학: 동맹이론의 적용과 평가.”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 김남균, “미국의 일본안보정책에 끼친 한국전쟁의 영향.” 『미국사연구』 제4집, 1996.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 김우상, “한·미 동맹의 이론적 재고.”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1호, 2004.
- 김일영, “전시정치의 재조명: 한국전쟁 중 북진통일론과 두 갈래 개헌론의 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2호, 2002.
- 동아일보사 편,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서울: 동아일보사, 1989.
-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서울: 두레, 1994.
- 문상석, “한국전쟁,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출발점: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 제86집, 2010.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I: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 1996.
- 박종철, “순망치한의 혈맹: 중국의 북한 지원을 중심으로(1953-55년).” 『사회과학연구논집』 제31집, 2007.
- _____,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제10집 2호, 2009.
- _____, “북한의 종파사건과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2009.
- _____, “북중관계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4집 1호, 2010.
- 박종효 편,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II』, 서울: 선인, 2010.
- 박태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이장희 외,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서울: 백산서당, 2004.
-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1』,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서대숙 지음·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8.

- _____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5권 경제발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04.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안철현,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1994.
- 양승함·박명림·윤상진 편, 『이승만(1): 트루만·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서신』, 서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0.
-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2002.
- 이상숙, “북한·중국의 비대칭관계에 대한 연구: 베트남·중국의 관계와의 비교.”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종석, “김일성의 ‘반중파투쟁’과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 친소파·남로계·연안파 ‘숙청’에 대한 최초의 연구.” 『역사비평』 통권8호, 1989.
- _____,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_____,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 _____,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중과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 이철순,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미국의 국가이익 규정을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0권, 2001.
- 유영익, “한미동맹 성립의 역사적 의의: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한국사 시민강좌』, 제36집, 2005.
- 전상인, “스카치폴의 혁명, 톨리의 전쟁, 그리고 한국의 국가(II).” 『연세사회학』 제14호, 1994.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집 2호, 2004.
- 정병일, “북·중 관계에 미친 연안파의 위상 재조명: 정치·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8집 2호, 2010.
- 조용중, 『대통령의 무혈혁명: 1952 여름, 부산』, 서울: 나남, 2004.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국내편』.
- _____, 『조선중앙년감 1959: 국내편』.
- _____, 『조선중앙년감 1959: 국제편』.
- _____, 『조선중앙년감 1962』.

-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 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편집부 엮음, 『중소대립과 북한: 사회주의진영 연구 기본 자료집』, 서울: 나라사랑, 1988.
- Chen, Jia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n Historical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Uneasy Al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2003.
- Cho, Soon Sung, “North Korea in the Sino-Soviet Rift: 1st Phase.”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0 no. 1, 1987.
-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 Cass, 1981.
- Hintze, Otto,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Felix Gi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Kim, Stephen Jin-Woo, *Master of Manipulation: Syngman Rhee an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1953-196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 Merrill, John,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 Morgenthau, Hans, and Kenneth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85.
-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Panmun, 1978.
- Park, Chang Jin, “The Influence of Small States upon the Superpowers: United States-South Korean Relations as a Case Study, 1950-1953.” *World Politics*, vol. 28, no.1, 1975.
- Simmons, Robert R.,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Skocpol, Theda and Margaret Somers,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2, no. 2, 1980.
- Stueck, William, and Boram Yi, "An Alliance Forged in Blood':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3, no. 2, 2010.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1949, 1952-1954*.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Zagoria, Donald S., "The Sino-Soviet Conflict and the Korean Problem."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0, no. 2, 1977.
- 刘金质·杨准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汇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ABSTRACT

The Path to Institutionalization of Alliance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ROK-US Alliance and DPRK-PRC Alliance

Cho, Hyuk-Jin(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ath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 in the two Koreas' state formation processes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ROK-US and DPRK-PRC alliances, both still in effect, have formed the regional order around Northeast Asia.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K and DPRK institutionalized their alliances in different models of "internal state formation" and "external relationship." Firstly, this paper explains the critical junctures of internal state formation of the two Koreas, the establishments of divided governments, the Korean War, the processes of state builders' consolidation of their power during and after the war. Secondly, this paper analyzes the external ordering of the stat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the external relationship structure and the influence of this ordering on the paths t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the alliances, it points out that South Korea became dependent on the US and North Korea started to carry its multilateral policy. At the regional level, the continuation of the alliances has intensified the regional division and it functions as an obstacle to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Keywords : ROK-US Alliance, DPRK-PRC Alliance, State Formation,
Northeast Asian Regional Structure

투고일 : 2015년 06월 22일, 심사일 : 2015년 07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8월 06일